시 론

김 태 기

- 현)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 서울특별시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노동경제학회 수석부회장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민주노총과 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외면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간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부 기관까지 함부로 쳐들어간다. 그러나 정부는 못 본체하고, 나서더라도 시간을 끌고,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다. 행정 관청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면서 농성을 벌여도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대검찰청마저 점거했다. 그래도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서서 국회 철책을 허물어뜨리면서 무단 침입하려했다. 이번에도 경찰을 폭행했지만 가해자들은 금방 석방되었다.

민주노총이 무법천지를 만든 것인지 정부가 자초한 것인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가 격주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고 한다. 행정, 사법, 입법 기관 모두 민주노총에게 당한 셈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시위 양상은 더 과격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를 투쟁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은 난동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성역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본다. 이래서 민주노총 세상이라는 비판이 들끓는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외면하면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밀려나간다. 법을 지키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동운동은 설 땅을 잃고, 힘으로 밀어붙

이는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기승을 부린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 협상이 아니라 기업에게는 파업으로, 정부에게는 시위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왔다. 자신은 정의고, 상대방은 불의라고 규정함으로써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를 정당화했다. 법을 어겨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처벌을 받으면 투사로 대접받고 사면복권 되었기에 투쟁은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컸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공로인지 정권 실세와 뿌리가 같아서 그런지 민주노총은 거리낌 없이 불법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참여하라고 민주노총을 설득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는 소수의 급진파들이 설치는 반면, 협상파는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경사노위 참여는 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균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지경에 빠졌고 불법 행위가 판쳐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문 정권은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공약했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꼼수로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 정부가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사회적 대화로 공약을 수정하려고 했다. 정부는 공약을 바꾸었다는 비판은 피하고 관련법을 바꾸는 정치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좋겠지만 민주노총으로서는 부담을 같이 지자는 셈이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ILO협약 비준도 마찬가지 문제를 앉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이유도 이 문제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특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약은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문제, 해직 교사의 복직문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전교조와 해직 교사문제는 정치와 선거 관련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이지 노동기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보니 일반 사람은 ILO협약 비준에 관심이 없고 이를 눈치 챈 정부는 조건을 달았다.

ILO협약 비준의 조건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며 파업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전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결사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법은 노동기본권 침해가 될 수 없지만 민주노총은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제한의 타격은 대형 사업장이 조직 기반인 민주노총이 크기 때문이다.

ILO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다. ILO협약은 밑바탕에 유럽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기준이 깔려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의 노동운동가마저 의아해할 정도로 노동조합의 관행의 특이하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ILO협약만 그대로 비준하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아닌 노동조합특권의 보장으로 변질된다. 그 혜택은 노동운동의 구조

상 민주노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기울어져 있는 힘의 불균형은 더 커지고, 노사관계는 파탄의 위험에 빠지며, 약자를 소외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된다.

문 정권은 공약대로 ILO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보니 이 또한 사회적 대화로 정치적 부담을 들어내려고 한다. 노동기본권의 실상과 ILO협약의 관계를 말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정부의 이상한 행태가 도리어 민주노총과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일반 사람은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한 체 겉으로 들어난 민주노총의 전투적 행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청년들마저 냉담할 정도라 민주노총은 고립되고 있다. 문 정권의 실세들은 이런 틈을 노려 민주노총을 서서히 사면초가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문 정권과 민주노총은 촛불혁명의 동지였다. 이러한 관계는 무리한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지만 노동정치로만 보면 성공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은 순간이었다. 지금은 민주노총의 노동정치가 한계에 부딪쳤고 정권과는 서로 배척하는 상극적 관계로 바뀌었다. 민주노총은 섣부른 정치활동으로 정권에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문 정권의 꼼수나 민주노총의 비정상적인 노동운동 모두 국민은 물론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노동정치가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운동 특권층의 이익에 충실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실종은 정권의 위기다. 정부는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를 눈감아 주다보니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고용은 위축되었다. 또한 각종 이해관계 집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사회 갈등이 격화되었다.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설 땅을 잃고 전투적인 노선으로 나아가도록 떠밀리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매달린다고 해도 소용없게 만든다. 이익의 논리나 권리의 논리가 실종되고 패거리를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이는 논리가 득세하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 사이 급성장해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문정권의 도움으로 제1노총의 자리를 넘보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성장했지만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 모순을 덮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 국민은 민주노총이 나라를 망친다고 아우성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이 위기지만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노동운동의 노선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는 신뢰와 규범이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도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정부와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며, 약자인 근로자와 일반 사람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도록 책무성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정권과 민주노총은 신뢰와 규범을 확립하는데 나서라.